

2014년 중국 양회 주요 내용과 향후 경제정책방향

문익준 아시아태평양실 중국팀 부연구위원 (ijmoon@kiep.go.kr, Tel: 3460-1024)

나수엽 아시아태평양실 중국팀 전문연구원 (syna@kiep.go.kr, Tel: 3460-1072)

이효진 아시아태평양실 중국팀 연구원 (hyojinlee@kiep.go.kr, Tel: 3460-1057)

차 례 ●●●

1. 2014년 양회 개요
2. 전인대 보고의 주요 내용
3. 향후 경제정책방향
4. 평가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제12기 2차 양회(兩會: 전인대, 정협)가 2014년 3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 동안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됨.
 - 전년도에 공식적으로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가 처음으로 금년도의 새로운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함.
 - 2013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중국 국내의 하방리스크 압력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 및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루었다고 평가함.
- ▶ 이번 양회를 통해서 안정적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을 강조하는 2014년 경제운용 목표를 제시함.
 - 금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년 연속 7.5%로 제시하면서 2013년 18기 3중전회에서 결정한 경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출
 - 2014년 9대 중점업무는 1) 개혁 심화, 2) 대외개방 수준 제고, 3) 내수 진작, 4) 농업현대화 및 농촌개혁 심화, 5) 사람 중심의 신형도시화 추진, 6) 혁신 기반의 경제구조 최적화, 7) 교육·위생·문화·사회 건설, 8) 민생개선, 9) 생태문명 건설
 - 소비자물가상승률 3.5%, 도시 등록실업률 4.6% 이내의 목표는 2013년과 동일하나, 도시 신규 일자리는 작년 보다 100만 개 높은 1,000만 개로 상향 조정하여 고용안정을 강조
 -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거시경제정책의 기조로 삼고, 시의적절한 정책 조정을 통해 경제의 안정성 보장
- ▶ 새로운 지도부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은 개혁심화, 대외개방 확대, 산업구조조정, 민생개선이 핵심임.
- ▶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전면적인 경제개혁 심화를 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됨.
 - '안정과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중국 신 지도부의 의지로 해석됨.
 - 우리나라는 중국의 내수확대 정책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별·산업별 프로젝트 시행 확대에 따른 사업기회를 확보하고, 한·중 FTA의 조속한 체결을 위한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함.
 - 성장과 개혁이 충돌할 경우 발생 가능한 위험과 중국 경제의 하방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함.

1. 2014년 양회 개요

■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제12기 2차 양회(兩會)¹⁾가 2014년 3월 3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었음.

- 정협은 3월 3일에 개막하여 12일에 폐막됐으며, 전인대는 3월 5일에 개막하여 13일에 폐막되었음.
- 2014년 양회는 전년도에 공식적으로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가 금년도의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처음으로 제시함.
- 중국의 주요 정책은 전년 9월경에 개최되는 공산당 중대회(中全會;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와 12월경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협의되지만, 주요 내용은 거의 공개되지 않으며 이듬해 3월에 개최되는 양회에서 공개됨.

■ 중국정부는 이번 전인대에서 「정부업무 보고(국무원)」,²⁾ 「2014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 보고(국가발전개혁위원회)」,³⁾ 「2014년 정부예산안 보고(재정부)」⁴⁾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2014년 정부의 중점업무, 중국의 거시경제 목표와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함.

- 3월 5일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전년도를 평가하고, 2014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주요 예상 목표치를 제시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쉰샤오스(徐紹史) 주임은 '2014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 보고'를 발표하고, 9대 항목의 중점업무 및 조치를 통해서 정부업무보고보다 구체화된 경제·사회정책 목표를 제시함.
- 재정부 로우지웨이(樓繼偉) 부장은 「2014년 정부예산안 보고」를 발표하고, 2013년 예산 집행결과와 2014년 예산안을 발표함.

■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는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이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최고의 국정 자문기구로, 조직 성격, 법적 지위, 기능 등이 전혀 다른 조직임(부록 1, 2 참고).

-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는 중국의 최고 국가기관으로 의사결정기관이자 집행기관이며, 지방 인민대표대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된 대표들이 매년 참가함.
- 전인대는 헌법개정, 법률제정, 국가 중대사의 결정 및 지도부 선출 권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수립, 국립 예산안 심사, 비준, 특별 행정구의 설치, 전쟁과 평화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함.
-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중국 최고의 국정 자문기구로서, 인민정협, 공산당 및 기타정당, 각 단체, 각 정계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음.

1) 중국은 국회와 유사한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와 중국 최고의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합하여 '양회'라고 지칭함.

2) 「政府工作报告」.

3) 「关于2013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执行情况与2014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草案的报告」.

4) 「关于2013年中央和地方预算执行情况与2014年中央和地方预算草案的报告」.

2. 전인대 보고의 주요 내용

가. 2013년 평가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국내의 하방리스크 압력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 및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루었다고 평가

- 경제의 안정적인 운용, 민생개선, 경제구조조정 성과, 사회사업 발전 등의 네 가지 측면에서 평가
- 2013년에 국민총생산액이 증가(51.9조 원 → 56.9조 원)하여 경제성장률 7.7%를 달성
 - 소비자물가상승률(2.6%)과 도시등록 실업률(4.1%)은 안정적으로 관리했고, 신규취업은 1,310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무역총액이 처음으로 4조 달러를 초과
 - 재정수입증가(12.9조 원), 농촌 빈곤층 1,650만 명 감소, 도시주민(7%) 및 농촌주민 수입증가(9.3%) 등을 달성
 - 식량생산량 1.2조 근(6,000억Kg)으로 10년 연속 증가했으며, 서비스업 비중이 46.1%로 증가하여 처음으로 2차 산업을 초과
 -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등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고, 특히 달탐사선 창어 3호의 달착륙 성공 등을 언급

■ 5대 중점업무 성과

- 1) 개혁개방 심화 및 시장활성화와 자생력 강화, 2) 혁신적인 거시정책을 통한 합리적인 경제 운용, 3) 경제구조조정 중시 및 경제발전의 질적 제고, 4) 민생개선 및 사회공평 추진, 5) 사회안정 유지
- 특히 개혁개방 심화 부문에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과 정부의 '보이는 손'이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했다고 평가
- 반부패법으로 인해서 '삼공'(三公) 경비가 35% 감소했으며 31개 성의 공무원 접대비가 26% 감소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했다고 평가

표 2. 2013년 중국 정부공작 회고 주요 성과정리

	중점업무	구체 내용
1	개혁개방 심화 및 시장활성화와 자생력 강화	1) 정부 권력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원 개혁으로 416개 행정 심사비준 사항 폐지 또는 하급기관 이양 - 정부 핵심 투자항목 목록 수정, 공상등기제도 개혁 추진 - 348개항에 대한 폐지 및 면제를 통해 기업 부담 1,500억 위안 감소 - 전년대비 신규 등록기업 및 민간투자 각각 27.6%, 63% 증가 - 대출이자 관리제도 전면개방,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스템 시범시행 - 부동산 통일 등기 체계 시행 2) 개방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해자유무역시범구 건설, 실크로드 경제권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 제기 - 스위스 및 아이슬란드와 FTA 체결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외무역 정책 시행, 세관 개혁, 검역 등 관리 감독 - 태양광 발전 관련 등 중요 무역분쟁에 대한 유연한 대응 - 고속철도, 원자력발전 등 기술 장비 해외투자 대폭 증가 - 해외여행객 연 1억 명에 근접

표 2. 계속

	중점업무	구체 내용
2	혁신적인 거시정책을 통한 합리적인 경제 운용	1)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 및 온건한 통화정책 - 광의 화폐 M2 13.6% 증가 - 재정지출 최적화로 당정기관의 일반 지출 5% 감소 - 소규모 기업 600만 개에 세수 혜택 지원 - 전국 정부 채무 감소, 금융 감독 및 유동성 관리 강화
3	경제구조조정 중시 및 경제발전의 질적 제고	1) 농업 기반 구축 - 종합적인 농업현대화 개혁 실시 - 1.5만 개 소형 저수지 조성 및 농촌 6,300만 인구의 식수 안전문제 해결 - 산림조성률 21.6% 달성 2) 산업구조조정 가속화 - 서비스업 발전 장려 및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촉진 - 4G 이동통신 기술 정식 상용화, 과잉 생산량 감축 - 에너지 소모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 각각 3.7%, 3.5% 감소 3) 인프라설비 건설 강화 - 남수북조(南水北調)사업 ⁵⁾ 동선(東線) 제1기 및 중선(中線) 주요구간 완공 - 석유 및 전력 운송 네트워크 확대, 비화석에너지 개발 비중 22.3% 달성 - 민간항공, 수운, 통신, 우편 네트워크건설, 철도, 고속도로 운영 거리 10만km ² 이상 달성 4) 혁신적인 발전 추진 - GDP 대비 R&D 비중 2% 초과, 과학기술체제 개혁으로 신기술 창조 - 슈퍼컴퓨터, 지능로봇 등 중요기술 개발
4	민생개선 및 사회공평 추진	1) 기본생활 보장 - 대학생취업촉진 계획 실행으로 고등교육 이수자 대다수 취업 - 농민공 취업서비스 및 직업 훈련 강화 - 도시 취업곤란인구 대상 취업 및 사회구제 제도 지원 - 양로보험 추진 및 기업퇴직자 기본양로금 10% 상승 - 보장성 주택 660만 채 및 기본 건설 540만 채 건설 2) 교육 발전 및 개혁 - 학생 영양상태 개선 계획의 특혜학생(3,200만 명) 확대 - 농촌빈곤지역 학생 중 고등교육 진학생 8.5% 증가 3) 의료·약품위생제도 개혁 - 도농기본의료보장 재정 표준 인당 280위안으로 확대 - 대환(大患) ⁶⁾ 의료보장 시범 28개 성으로 확대 및 질병응급구조 시범 실시 - 국가기본 공공위생 서비스 전면 시행 - 농촌 무료 산전 검사 실시(600만 가구 혜택) 4) 문화산업 발전 - 공공 문화시설 확대 및 무료 개방 - 문화제도 개혁 및 문화 산업 15% 이상 증가
5	사회안정 유지	1) 긴급 복구 시스템 강화 - 자연재해 발생 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원조협력체제 구성으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최소화 2) 식품 안전 및 시장 감독 강화 - 식품안전사고 발생률 16.9% 감소 - 식의약품 관리감독기구 조직 및 식의약품안전 관련 전문 항목 정비 - 약품관리 방법에 따라 영유아분유 품질을 엄격 관리 3) 준법사회 실현 - 국무원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노동교화를 포함한 34개 법률에 대한 수정 요청 및 47개 행정법규 수정, 민원 서비스 제도 완비 4)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 중앙정부기관 “삼공”(三公) ⁷⁾ 경비 35% 감소 - 31개 성 공무원 접대비 26% 감소 5) 안정적 외교관계 구축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상해 경제협력기구, BRICs 국가, 동아시아 정상회담 참석 및 20개 국 순방 - 개도국과 새로운 외교 관계 수립 및 주요국과 원만한 관계 발전도모 - 중대한 국제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 수행

자료: 2014년 「정부업무보고」 정리.

나. 2014년 경제운영 중점

■ 2014년 양회는 중국 신지도부가 2013년 공식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하는 것으로, 3월 5일 시작된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는 임기 중 첫 번째 「정부업무보고」를 발표함.

- 작년에는 퇴임을 앞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새로운 지도부에게 4대 중점업무를 건의했으나, 이번에는 리커창 총리가 자체적인 목표와 중점업무를 제시함.

※ 2013년 중점업무 건의: ①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가속화 및 지속적이고 건전한 경제발전 촉진, ② 농업 및 농촌 발전 토대 강화와 도농간 통합발전 촉진, ③ 민생 보장 및 개선, ④ 개혁개방 심화

- 2014년 9개 중점업무:

1) 개혁 심화 2) 대외개방 수준 제고 3) 내수 진작 4) 농업현대화 및 농촌개혁 심화 5) 사람 중심의 신형도시화 추진 6) 혁신 기반의 경제구조 최적화 7) 교육·위생·문화·사회 건설 8) 민생개선 9) 생태문명 건설

- 2013년 원자바오가 건의한 4대 중점업무 중 개혁개방 심화가 맨 마지막에 제시되었으나, 2014년에는 개혁개방을 가장 우선 순위에 배치하고 있음.

■ 중국의 신지도부가 2013년 18기 3중 전회에서 결정한 경제개혁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임.

- 특히 행정제도, 시장 관리감독, 재정제도, 금융제도 및 국유자산 소유제 등 주요 부문별 개혁 추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전면적인 개혁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능동적인 개방 확대 및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서비스 부문 개방 확대와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표 3. 2014년 정부업무보고 중점업무

중점업무		구체 내용	
1	개혁 심화	행정제도 개혁	- 200개 이상 행정심사 비준 항목 폐지 또는 하급기관 이양 - 투자 심사비준 제도 간소화 개혁
		사후 감독 강화	- 원스톱 심사 시스템 확대 및 시장 관리 감독 시스템 강화 - 시장경쟁원칙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관련 기업 평가제도 도입
		재정세수 제도 개혁	- 각급 정부 예산, 결산 및 삼공(三公) 경비 공개 - 증치세(부가가치세) 부과 시범 대상 확대 - 부동산세 및 환경보호세 도입 - 지방정부 융자규제 체계 확립

5) 남부지역의 풍부한 수자원을 북부지역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선(東線), 중선(中線), 서선(西線) 등 3개 노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50년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음. 동선은 약 500억 위안을 투자하여 강소성 장강지역에서 산둥성 위해까지(1,467km) 11년간 건설하여 약 1억 명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함.

6)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는 중대질병으로, 악성종양, 심장동맥경화증에 따른 피사 등이 있음.

7) 공무원 출장경비, 공무원 차량구매 및 유지비, 공무원 접대비 등 3대 공무 비용을 의미함.

표 3. 계속

중점업무		구체 내용
1	개혁 심화	금융제도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금리 결정권 확대 및 민간자본 금융업 투자 허용 - 위안화 환율 합리적 수준의 안정 유지 및 환율 변동 폭 확대 - 금융관리감독협조 체계 완비 및 국제투자자금 관리 감독 강화
		각종 소유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합소유제 확대에 따른 공공사업부문의 민간 투자 허가 - 국유자산관리 제도 완비 및 국유자본투자운용공사 시범 운영 추진
2	대외개방 수준 제고	농동적 개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업 부문 개방 확대 - 상해자유무역시범구의 원만한 관리 감독 및 새로운 시범구 개발
		수출증대 및 무역 균형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전자상거래시범 확대⁸⁾ - 고부가가치 가공무역 및 서비스 무역 발전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투자관리방식 개혁 - 실크로드경제권 개발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추진
		개방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무역, 정부조달, IT, 환경보호, 전자상거래 관련 협정 추진 - 중·미, 중·EU 투자협정 추진 및 한국, 호주, GCC와 FTA 체결 가속화
3	내수진작	소비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 제고 - 양로, 건강, 관광, 문화 등 서비스 소비 확대 - 소비 촉진을 위한 전자상거래 발전 장려
		투자장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자본의 투자시범항목 제정 - 투자 체계 최적화 및 고정자산투자의 합리적인 성장 - 중앙예산의 보장성 주택, 농업, 용수공급, 중서부 철도,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사회 복지 등에 투자 확대
		새로운 지역경제권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부대개발 및 동북지구 노후공업지구 발전 추진 - 지역별 발전 전략 촉진 및 낙후지역 개발 확대
4	농업현대화 및 농촌개혁 심화	농업보호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한 농산물 가격제도 연구 심화 - 주요 농산물 및 신종 작물재배에 대한 보조금 지급
		농촌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인프라 시설 완비 및 6,000만 농촌 인구의 식수 공급 문제 해결 - 낙후된 농촌 주택 260만 채 재개발, 농촌 도로 20만 킬로미터 건설
		농촌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기본경영제도 완비 및 다양한 경영방식 지원 - 농촌 토지 제도 및 국유산림, 국유목초지 개혁
		낙후지역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보호 및 공공서비스 제공 - 농촌 빈곤 인구 1,000만 명으로 감소
5	사람 중심의 신형도시화 추진	도시민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구제도 개혁으로 도시장기 거주 경제활동 농민공 및 그 가족의 호구 변경, 호구 미등록 농민공에 대한 거주증 지급 제도 도입
		중서부지역 신형 도시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인프라 설비 건설 촉진
		도시화 관리 시스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후 주택 재개발 및 공공교통 발전 촉진 - 역사·문화 및 자연경관 보호 및 농촌 계획 관리 강화
6	혁신 기반의 경제구조 최적화	과학기술 제도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연구기관 설립 장려 및 특혜 제공 - 과학기술단지 확대 및 인재개발 계획 심화 - 정부 공공과학기술 서비스 플랫폼 및 지식재산권 강화
		산업구조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 서비스업 발전 촉진 및 시장경쟁 현실화 - 신흥산업 플랫폼 설립을 통한 미래형 산업 발전 유도
7	교육·위생·문화·사회 건설	교육 사업 발전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환경 최적화 및 교육 기회 평등화 - 중앙정부의 교육부문 투입 증대 및 관리감독 강화
		의료제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보장 제도 개혁 및 의료진 양성 강화 - 현금 공립의원 종합개혁 시범지역 1000개 달성 및 대도시 공립의원종합 개혁시범 확대
		문명사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교역 발전 및 미디어 시스템 강화
		사회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안전에 관한 응급 관리 시스템 강화
8	민생개선	고용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공, 퇴역군인을 비롯한 취업곤란인구 구제 제도 수립
		수입분배 제도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격차 축소 노력

표 3. 계속

중점업무		구체 내용
8	민생개선	고용환경 개선 - 농민공, 퇴역군인을 비롯한 취업곤란인구 구제 제도 수립
		수입분배 제도개혁 - 소득 격차 축소 노력
		사회구제 제도 개혁 - 기본 양로보험제도 수립 - 실업보장 및 산업재해 제도 완비 - 여성권익보호, 청소년 및 미성년자 보호, 빈곤가정 보장, 장애인 기본 서비스 제공 및 장애 방지 시스템 강화
		주택보장 - 신규 보장성 주택 700만 채 이상 건설 - 건전한 부동산 시장 발전 촉진
		식품안전 강화 - 안전생산 관련 법률 시행 및 지속적인 정비 - 식의약품안전 관리 감독 제도 수립
9	생태문명 건설	오염방지 시스템 강화 - PM10 및 PM2.5 감축 - 정부, 기업, 공공부문 협력으로 대기오염 통제 기제 마련
		에너지 생산 및 소비방식 개혁 - 에너지 소모량 3.9% 이상 감축 - 이산화탄소 및 기타 대기 오염물질 2% 감축 - 비화석연료, 풍력, 태양광 발전 장려 - 수력 및 원자력발전 시설 착공 - 천연가스, 셰일가스 등 탐사 강화
		환경보호 - 삼림 및 목초지 조성 및 양자강, 황하, 란창강 생태보호 강화

자료: 2014년 「정부업무보고」 정리.

■ 역대 정부업무보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개혁’과 ‘발전’임.

- 2004년부터 2013년 동안 가장 많이 인용된 단어는 ‘개혁’으로 총 721회가 인용됨.
- 2014년 1~2월에 열린 지방양회에서 ‘개혁’이 가장 핵심적인 단어였으며, 평균 50회 정도 인용되었음.
- 1978년부터 2013년 동안 가장 많이 인용된 단어는 ‘발전’으로 총 4,328회가 인용되었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2014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 보고」에서 2014년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9개 항목의 중점업무 및 조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

- 2014년이 전면적인 개혁심화의 원년이며, 12.5규획 목표달성의 중요한 해라고 명시
- 전면적인 개혁심화, 산업구조조정, 민생개선이 중요
- 1) 전면적인 개혁 심화 및 개방확대, 2) 내수확대, 3) 농업의 건전한 발전 촉진, 4) 신형도시화 추진, 5) 가격 조정 및 관리감독 강화, 6) 산업구조조정 업그레이드, 7) 지역발전, 8) 생태문명건설 추진, 9) 민생개선

8) 국제전자상거래의 빠른 발전을 위해서 중국정부는 2012년 5개 도시(정저우, 항저우, 닝보, 상하이, 충칭)를 국제전자상거래시범구로 지정함. 현재 정저우가 가장 신속하게 시범지 구축작업을 시행 중이며 유일하게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4. 2014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9대 중점업무 및 조치

	중점업무	주요 내용
1	전면적인 개혁 심화	1) 행정체제 개혁 2) 국유기업 개혁 3) 세수체제 개혁 4) 금융체제 개혁 5) 자원가격 개혁 6) 투자체제 개혁 7) 농촌체제 개혁 8) 사회사업개혁 혁신
	개방확대	1) 수출입구조 개선 2) 외상투자시장 진입 확대 3)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의 해외진출전략 지원 4) 양자·다자 및 지역경제협력 강화
2	내수확대	* 소비 측면 1) 민간소비 확대 2) 새로운 소비 시장 확대 3) 소비환경 개선
		* 투자 측면 1) 민간투자 확대 2) 정부투자구조 개선 3) 12.5규획 건설임무 실행
3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 촉진	1) 주요 농산품 생산의 안정적인 발전 유지 2) 농업보호제도의 강화 및 완비 3) 농촌의 기초시설 건설 강화
4	신형도시화 추진	1) 농업인구의 도시화 추진 2) 도시화의 분포 및 형태 개선 3)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 제고 4) 도시화체제 완비
5	가격조정 및 관리감독 강화	1) 공급보장 2) 가격조정체제 완비 3) 가격관리감독 강화 4) 물가보조금 연동체제
6	산업구조조정 업그레이드 촉진	1) 중점산업 분포 조정 개선 2) 과잉생산문제 해결 3) 혁신발전 전략의 구체적 실현 4) 기초산업 강화 5) 서비스업 발전 가속화
7	지역발전	1) 총체적인 지역발전 전략의 심도 깊은 실시 2) 새로운 경제지원구역 육성 3) 미개발지역 발전능력 증대 4) 주체공농지역제도의 구체적 실현 가속화
8	생태문명건설 추진	1) 제도보장 가속화 2) 에너지절약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강화 3) 순환경제 발전 4) 환경관리 및 생태건설 5) 기후변화 대응
9	민생개선	1) 적극적인 취업정책 실시 2) 도시와 농촌 사회보장시스템 촉진 3) 사회사업발전 가속화 4) 보장성 주택 및 부동산시장 관리 5) 사회관리 및 공공서비스의 혁신

자료: 「2014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다. 2014년 경제분야별 거시경제 운용 목표와 방향

1) 주요 경제목표

■ 적절한 수준의 경제성장 속 본격적인 경제개혁 추진

- 2014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년 연속 7.5%로 제시한바, 개혁과 성장유지를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 중국 신지도부는 현재 중국경제가 성장방식의 전환,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중대 기로에 있으며, 2013년 18기 3 중전회에서 결정한 경제개혁을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나치게 높은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
- 다른 한편으로 여전히 세계경제의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률과 발전을 통한 고용안정 및 민생개선 문제 역시 향후 중국경제 운용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9) 2011년 6월 8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전국적인 국토개발계획임. 최적개발구, 중점개발구, 제한개발구, 금지개발구 등 네 개 지역으로 구분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보고는 이번 성장률 목표치가 ‘탄력성과 지도성’의 성격을 함께 내포한다고 밝힘.
- 적절한 범위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7.5%를 설정하면서, 탄력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
- 각 지방정부는 각자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 적절한 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하되 지나치게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한 경쟁은 자제해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함.

■ 물가안정세 유지

-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치도 지난해와 동일한 3.5%로 설정함.
- 농업생산 증가, 제조업 공급 증가로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나 경제개혁 추진에 따른 자원가격 상승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20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인 2.6%보다 높은 목표치를 제시

■ 민생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에 역점

- 도시 신규 고용을 2013년 목표치(900만 명)보다 높은 1,000만 명 이상, 도시 등록 실업률 목표치는 4.6% 이하로 설정함으로써 고용 안정을 강조함.

■ 국내소비 촉진을 통한 균형성장

- 고정자산투자 증가율과 무역증가율 목표치를 각각 17.5%, 7.5%로 2013년에 비해 0.5%포인트 하향조정한 반면, 소비재 소매판매 증가율 목표치는 2013년과 동일한 14.5%로 유지함.
- 또한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및 무역증가율 목표치는 2013년 실제치보다도 낮으며, 소비재 판매 증가율 목표치는 2013년 실제 증가율(13.1%)보다 높음.
- 이는 투자와 수출에 의존한 성장방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확대를 통한 균형적인 성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제개혁 및 구조조정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 아울러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투자를 억제함으로써 과도한 투자를 위한 지방정부의 채무 부담 압력을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됨.

표 5. 중국 주요경제지표의 2013년 실적과 2014년 목표

주요 지표	2013년		2014년
	목표	실제	목표
GDP 성장률(%)	7.5	7.7	7.5
소비자물가상승률(%)	3.5	2.6	3.5
M2 증가율(%)	13	13.6	13
재정적자(조 위안)	1.2	1.2	1.35(GDP 대비 2.1%)
도시 신규 고용(백만 명)	9	13.1	10
도시 등록 실업률(%)	4.6	4.05	4.6

표 5. 계속

주요 지표	2013년		2014년
	목표	실제	목표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18	19.3	17.5
소비재 소매판매 증가율(%)	14.5	13.1	14.5
무역증가율(%)	8	7.6	7.5
도시화율(%)	53.7	53.7	54.6

자료: 「2014년 정부업무보고」; 「2014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 보고」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2) 거시경제정책 운용 방향: 적극(積極)적 재정정책과 온건(穩健)한 통화정책

■ 이번 전인대에서 중국정부는 2013년에 이어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의 지속적인 시행을 2014년 거시경제정책 기조로 제시함.

- 또한 시의적절한 정책 조정을 통한 경제의 안정성 보장이 거시정책의 기본적인 운용 방침임을 밝힘.

■ **적극적 재정정책**: 재정적자 규모를 늘려 민생개선, 경제구조조정 등에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적극적 재정정책의 핵심임.

- 재정부가 제출한 「2014년 정부 예산안 보고」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한 2014년 국가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은 각각 14조 530억 위안, 15조 4,030억 위안으로, 재정적자 규모는 2013년 대비 1,500억 위안 증가한 1조 3,500억 위안(GDP 대비 2.1%)으로 편성됨.

○ 이 중 중앙정부의 재정적자가 2013년 대비 1,000억 위안 증가한 9,500억 위안이며, 지방정부의 재정적자는 2013년 대비 500억 위안 증가한 4,000억 위안임.

- 또한 재정지출의 확대와 함께 세제개혁 및 감세정책 완비, 정부지출 구조 개선을 통한 민생개선, 재정자금의 효율적 관리, 지방정부 채무 관리 강화 등이 재정정책의 중점 과제로 추진될 계획임.

표 6. 중국의 재정정책 운용 방향

재정정책 중점 과제	주요 내용
세제개혁 및 구조적 감세정책 완비	- 영업세의 증치세(부가가치세) 통합 시행범위 확대 - 영세 소기업에 대한 우대세제정책 확대 - 기업연금 및 직업연금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추진
정부지출구조 개선을 통한 민생개선	- 민생개선 및 보장에 초점 - 교육, 사회보장, 보건, 환경보호,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지출에 중점 - 해외출장, 관용차, 공식접대를 엄격히 통제하여 행정적 경비지출 축소
재정자금의 효율적 관리	- 재정자금을 합리적으로 활용 - 이월 자금을 정기적으로 정산하는 시스템 구축 - 종합적인 계획에 의한 재정자금 활용
지방정부 채무 관리 강화	- 지방정부의 정부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체제 설립 가속화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채무관리 및 채무위기에 대한 조기경보체제 수립을 위해 적절한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자료: 「2014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 보고」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한편 중앙정부의 2014년 예산지출 배분안을 살펴보면 민생 관련 분야에 대한 지출이 강조되고 있는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역점이 민생개선에 있음을 알 수 있음.
- o 2014년 중앙정부 예산지출 규모는 2013년에 비해 9.3% 증가한 7조 4,880억 위안으로 편성됨.
- o 사회보장·고용에 대한 지출은 7,153억 위안으로 전체 지출 중 국방(1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9.6%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 의료·보건, 사회보장·고용, 보장성주택 등 민생과 관련된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이 전체 예산의 22.6%를 차지하고 있음.
- o 또한 이들의 2013년 대비 증가율은 국방을 제외한 주요 지출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7. 중국 중앙정부의 2014년 예산지출 배분안

주요 지출 항목	지출 규모(십억 위안)	총 지출 대비 비중(%)	2013년 대비 증가율(%)
교육	413.4	5.5	9.1
과학기술	267.4	3.6	8.9
의료·보건	303.8	4.1	15.1
사회보장·고용	715.3	9.6	9.8
보장성주택	252.9	3.4	9
농업·임업·수질보호	648.7	8.7	8.6
에너지절약·환경보호	210.9	2.8	7.1
교통·운송	434.6	5.8	5.1
국방	808.2	10.8	12.2
공공안전	205.1	2.7	6.1

자료: 「2014년 중국정부 예산안 보고」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온건한 통화정책**: 이는 금융시장의 수요와 공급 균형 지향, 적절한 유동성 관리를 위해 신중한 통화정책을 운용하여 건전한 금융시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실물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임.

- 이를 위해 M2 증가율의 목표치를 지난해와 동일한 13%로 제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금융자원의 분배 개선, 금융시장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화정책의 주요 과제로 설정함.
- o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신용대출, 급격한 국제자본 유출입을 조절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 o 이와 달리 삼농(농업, 농촌, 농민), 중소기업 및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 지원은 보다 확대될 계획임.

표 8. 중국정부의 통화정책 운용 방향

통화정책 중점 과제	주요 내용
신중한 통화관리 운용	- 통화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통화 및 신용공급, 총용자 규모를 안정적이고 적절한 수준으로 인도 - 적절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통화·금융시장 환경을 조성
금융자원 분배 개선	- 자금순환 속도를 증가 - 삼농(농업, 농민, 농촌),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확대 유도 - 실물경제, 산업전환 및 업그레이드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대 - 금융시장 및 금융상품 다변화: 시장기능 강화, 직접금융 비중 증가
금융부문 관리·감독 체제 개선	- 신용, 채권, 재무투자 상품, 은행간 거래, 신탁 부문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관리 강화 - 국제자본 이동에 대한 엄격한 감독 - 과도한 자본유출입으로 인한 충격 방지 - 위안화 환율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

자료: 「2014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 보고」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향후 경제개혁 방향

■ 「정부업무보고」(국무원)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 보고」(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종합하여 새로운 지도부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1) 개혁심화 2) 대외개방 확대 3) 산업구조조정 4) 민생개선의 측면에서 분석

- 두 보고서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초안보고」의 가격조정과 관리감독 강화, 지역발전 항목을 제외하고서는 중복되고 있으나, 각각 설명과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판단되었기에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예측

■ 2011년부터 제시되었던 기존의 경제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2013년 18기 3중전화에서 발표하였던 경제개혁개방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들이 새롭게 제시되었음.

- 2013년 양회에서는 전임 총리인 원자바오 총리가 발표하면서 명확하게 경제정책 방향이 드러나지 않았던 반면에, 2014년 양회에서는 18기 3중전화에서 제시하였던 개혁개방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음.

- 2011년 양회부터 '안정속의 발전'(穩中求進)이 4년 연속 기본 경제정책 기조로 제시되었으며, 올해는 '개혁혁신(改革創新)'이라는 표현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향후 경제개혁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2011년부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기본 거시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해왔다는 점에서 지도부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계획 아래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음.

○ 일관적인 경제정책 방향이 유지되는 이유는 중국의 경제정책이 12.5규획(2011~15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며, 13.5규획이 시작되는 2016년부터는 경제개혁과 관련된 정책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전망됨.

■ 1) 개혁 심화: 행정개혁, 국유기업 개혁, 세제개혁, 금융개혁 등을 추진

- (행정 개혁) 200개 이상의 심사항목을 폐지하면서 비준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 (국유기업 개혁)¹⁰⁾ 국유자산관리체제를 완비하고 혼합소유제를 확대

○ 특히, 금융, 석유, 전력, 철도, 전신, 자원개발, 공용사업 등에 대한 민간자본 허용

- (세제 개혁) 증치세 징수범위를 철도운송, 우정(郵政), 전신 등으로 확대하고, 소비세, 자원세 개혁을 심화하고 부동산세, 환경보호세 등을 입법화

○ 중국의 증치세(부가가치세)는 소비형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생산형 부가가치세로, 고정자산 구입시 제품 가격에 세금을 포함됨.

○ 개인소득세,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개혁을 통한 감세정책과 자원세등 환경, 자원에 대한 증세정책을 병행

- (금융 개혁) 예금보호제도의 확립, 민간자본의 중소형 민간은행 설립허가,¹¹⁾ 금리자유화, 환율시장의 자유화,

10) 「정부업무보고」에서는 국유기업 대신에 '각종 소유제경제 활성화'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많은 반대의견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한편 NDRC의 보고서에는 '국유기업개혁'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음.

자본 항목의 태환 등을 추진

-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인민은행장은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1~2년내에 예금금리 상한선을 폐지하는 금리자유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함.
- 중국 인민은행은 3월 15일 전격적으로 위안화 환율 하루 변동폭을 기존의 $\pm 1.0\%$ 에서 $\pm 2.0\%$ 로 확대하였음.
- 이외에도 자원가격 개혁, 투자체제 개혁, 농촌체제 개혁, 사회사업 개혁 등이 논의됨.

■ 2) 대외개방 확대: 수출입구조 개선, 외상투자 확대, 해외진출전략 지원, 양자·다자간 지역경제협력 강화

- (수출입구조 개선) 수출입 증가율 목표를 7.5%로 제시하고 통관제도 간소화, 가공무역구조 선진화 등을 추구
- (외상투자 확대) 외상투자관리시스템 개혁을 통해서 서비스업을 개방하고, 상해자유무역시범단지와 같은 새로운 시범구가 지속적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 이미 헝진자유무역지시범지구, 충칭내륙자유무역시범단지, 르자오(日照) 무역자유항시범지구 등이 국무원에 설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2014년 금융을 제외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3.5% 증가한 1,217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함.
- (해외진출전략 지원) 해외투자지원정책을 정비하여 에너지자원, 농업개발협력, 우위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 2014년 금융을 제외한 해외직접투자(ODI)는 10% 증가한 992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함.
- 중·미, 중·EU 투자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함에 따라, 주요 선진국과의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
 - 중·미 투자협정은 2008년 제4차 중미전략경제대화에서 시작되었으며, 2014년 3월 제12차 협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되었음.
 - 중·EU 투자협정은 2013년 제16차 중·EU 정상회의에서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으며, 제1차 협상이 2014년 1월 베이징에서 시작됨.
- (양자·다자간 지역경제협력 강화) 한국·호주·GCC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가속화하기로 명시
 - 중국이 현재 10차 협상이 진행된 한·중 FTA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는 예상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음을 시사
 - 중국·호주 FTA 협상은 2005년 4월부터 시작되어 19번의 협상 끝에 농산물 교역과 외국인투자 제한 등으로 인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였으나, 최근 호주의 토니 애벗 총리가 1년내에 체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함.
 - 중국·GCC FTA는 2004년 협상이 시작되어 5차례에 걸친 협상과 2차례의 패널 미팅 끝에 2009년에 중단되었으나, 최근 양국은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함.
 - 현재 4차 협상까지 마친 한·중·일 FTA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중·일 FTA는 시간이 좀더 걸릴 것으로 전망됨.

■ 3) 산업구조 조정: 신산업 육성과 사람 중심의 신형 도시화

- 4G 통신, 집적회로, 빅 데이터, 신에너지, 신소재 등 미래형 산업을 육성하고 과잉생산을 억제

11) 「중국 민영은행 설립동향」(2014), 지역경제포커스(근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

- 12.5 규획에서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제시하면서 2030년까지 3단계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혁신을 강조
- 과잉생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2014년에 철강 2,700만 톤, 시멘트 4,200만 톤, 평면유리 3500만TEU 감량 목표
- (사람 중심의 신행 도시화) 토지개발의 성격이 강했던 기존의 도시화에서 사람 중심의 신행 도시화를 추진
 - o 2020년까지 도시상주 농업인구 1억 명의 도시호적 편입, 1억 명 도시 주거소의계층의 거주권 확대, 1억 명 규모의 중서부지역 도시화를 추진¹²⁾
 - o 그동안 약 2억 5,278명 가량의 無호적 농민공들에 대한 주택제공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도시화의 관건이었으며, 이번 전인대에서 도시 농민공들에 대한 정책이 처음으로 제시됨.
 - o 중국 국무원은 3월 16일 ‘2014~20년 국가 신행도시화계획’을 발표하여 현재 53.7%인 도시 상주인구 비율을 2020년까지 60%로 높이고 도시호적을 가진 인구도 현재 36%에서 45%로 확대하기로 함.
 - o 이를 위해서 인구 20만 명 이상의 중소도시에는 2020년까지 철도를 연결하고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에는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등을 신설하기로 함.

■ 4) 민생개선: 고용보장, 소득증가, 주택보급, 사회보장

- (고용보장) 2014년 도시 신규 취업 1,000만 창출, 도시 등록 실업률 4.6% 이하로 관리할 목표를 제시함.
- (소득증가)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 및 중산층 비중을 확대
- (주택 보급) 2014년 서민형 보장성 주택 470만 호를 포함한 총 700만 호 착공을 예정함.
- (사회 보장) 도시와 농촌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를 통합한 양로보험제도를 구축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제도 등을 완비
- (생태문명 건설) 자원 절약 및 환경친화적인 사회 건설을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취할 예정
 - o 소형 석탄보일러 5만 대 퇴출, 노후차량 600만 대 폐차, 1,500만kw의 화력발전설비에 탈황시설 부착 예정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들을 제시함.
 - o 환경오염 개선을 위하여 2014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각각 3%, 2.9% 감소시킬 예정이라고 밝힘.

4. 평가 및 시사점

가. 평가

■ 전인대 정부업무보고로 본 중국 경제의 금년도 운영은 ‘안정 속 개혁추진’으로 본격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양회가 개혁보다는 안정적인 성장에 중점을 두면서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하는 수준이었다

12) 三个1亿人 2013년 12월에 열린 중앙농촌공작회의에서 처음 제시된 용어로서, 2020년을 목표로 함.

면, 금년에는 안정을 전제로 본격적인 경제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¹³⁾

- 2013년 양회는 전임 지도부의 목소리를 통해서 경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수준이었으나, 2013년 가을에 열린 18기 3중전회의 ‘개혁의 전면적 심화에 관한 중대 문제 결정’을 통해 청사진을 제시하고 금년에는 향후 10년을 이끌어갈 경제개혁의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함.
- 2013년 정부업무보고의 ‘정치적 지혜와 용기’나 18기 3중 전회의 ‘개혁의 믿음과 용기’와 같은 개혁심화를 위한 의지를 표현하는 단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개혁심화를 위한 정치적인 발판을 어느 정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됨.
- 강력하게 실시했던 반부패법, 체제개혁심화영도소조 신설, 국가안전위원회 설립 등으로 인하여 시진핑 주석에게 경제개혁을 실행할 강력한 힘이 집중된 것으로 보임.
- ‘안정’과 ‘개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중국 신 지도부의 의지로 해석됨.

■ 2014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년 연속 7.5%로 제시하고 ‘탄력적’이라는 표현을 덧붙인 것은, 중국 정부가 성장률 달성에 집착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함.

- 만약 7.0%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였다면, 국내외적으로 중국경제의 하방리스크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과거와는 달리 발개위의 보고서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 7.5%에 대한 해석을 추가하였으며, 이는 ‘탄력성과 지도성의 성격을 함께 내포한다고 밝힘.
- 로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장은 전인대에서 7.2~7.3%도 성장률 목표치와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성장목표 달성보다는 고용을 더 중요시한다고 언급함.

나. 세계경제 및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

■ 향후 해외진출 및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

- 2014년 금융을 제외한 해외직접투자(ODI) 증가율 10%, 금융을 제외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율 3.5%를 제시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에 나설 전망이다.
- 해외투자의 다각화를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국가와 선진기술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투자할 것으로 예상됨.
- 중·미, 중·EU 투자협정과 양자 및 다자간 지역경제협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선진국과의 교역과 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구체적으로 한·중 FTA의 조속한 체결이 언급됨에 따라 이를 우리의 협상전략에 활용

- 환경보호, 투자보호,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등을 새로운 의제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13) 「2013년 중국 양회 주요 내용과 향후 경제정책방향」(KIEP) 참고.

협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장진입, 세관감독, 검역 시스템 등의 비관세 장벽 개혁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대응방안 마련
- 중국의 FTA 전략 및 대외개방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TPP, RCEP, 한·중·일 FTA 등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과 자유무역협정 협상 전략에 심분 활용

■ 중국의 내수확대정책에 대비한 전략 수립

- 경제개혁에 따른 내수확대정책을 한국 기업에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분석과 전략수립이 필요
- 중국 국무원이 3월 16일 ‘2014~20년 국가 신형도시화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내수확대정책을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자원절약형·친환경산업 발전 관련 녹색산업 협력 및 관련 서비스 진출을 고려해야 함.
 - 신형도시화에 따른 SOC 건설, 민생개선 위한 보급형 주택 건설 등 관련 서비스 및 제품 시장진출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함.
 - 산업구조 고도화, 수출의 질적 향상, 대외불균형 개선, 내수주도 경제성장 방식의 일환으로 과도한 무역흑자를 축적하고 있는 가공무역 축소정책에 따른 내수용 수입시장규모 확대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방안 마련이 시급함.

■ 지역별, 산업별 프로젝트 시행 확대에 따른 사업기회 확보

- 균형발전전략에 따라 연안지역에서 중서부지역으로 발전전략이 이동하고 있으며, 중서부 1억 명의 도시화 추진과 같은 구체적인 전략이 발표함에 따라 이를 활용할 방안 모색
- 특히 「정부업무보고」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금융, 석유, 전력, 철도, 전신, 자원개발, 공용사업 등에 대한 진출 기회를 탐색해야 함.
 - 신흥전략산업, 사회안전망,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민생개선 등 분야의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한·중간 서비스무역 확대방안 모색

- 한·중 간 서비스 교역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 323.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000년 대비 7배 증가했으며, 대중국 서비스교역 수지는 2012년 -17.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계속 적자 기조임(표 9 참고).¹⁴⁾
- 한·중 간 상품수지는 2012년에 369.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000년 대비 14.8배 증가하였음.
- 중국의 서비스 산업에 대한 개방수준이 높아지면서 향후 세분화된 양국의 서비스 산업별 경쟁력 분석을 통해 진출방안 및 지원책을 모색해야 함.

14) 한국은행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새로운 국제기준(BPM6)을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수지는 중계무역 순수출의 재분류에 따라 개편 전보다 악화됨.

표 9. 한국의 대중국 상품 및 서비스 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상품수지	2,490	13,673	4,973	17,887	33,326	25,434	36,994
서비스수지	-678	-1,999	-391	-2,809	-1,454	-3,509	-1,720
서비스수출	1,966	6,053	13,533	9,793	13,558	13,751	15,307
서비스수입	2,644	8,053	13,924	12,603	15,013	17,261	17,027

자료 : 한국은행

■ 성장과 개혁이 충돌할 수 있는 위험이나 잠재적 리스크가 표출될 위험에도 충분히 대비

-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중국정부의 경제개혁 심화로 인한 다방면의 정책적 리스크가 단기 성장을 둔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예를 들어, 공평한 사회안정을 위해 실시된 반부패법이 소비 위축과 성장 둔화를 가져오면서 단기적 위험을 초래하고 있음.
- 중국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위험의 타부문으로의 전이나 기존세력의 반대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실패 가능성이 존재함.
- 현재 중국경제의 잠재 리스크로 지목되는 부동산 버블, 그림자 금융, 지방정부 부채 등이 외부 혹은 내부 충격에 의해 표출되거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부록 1. 정협과 전인대의 차이점

부록 표.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차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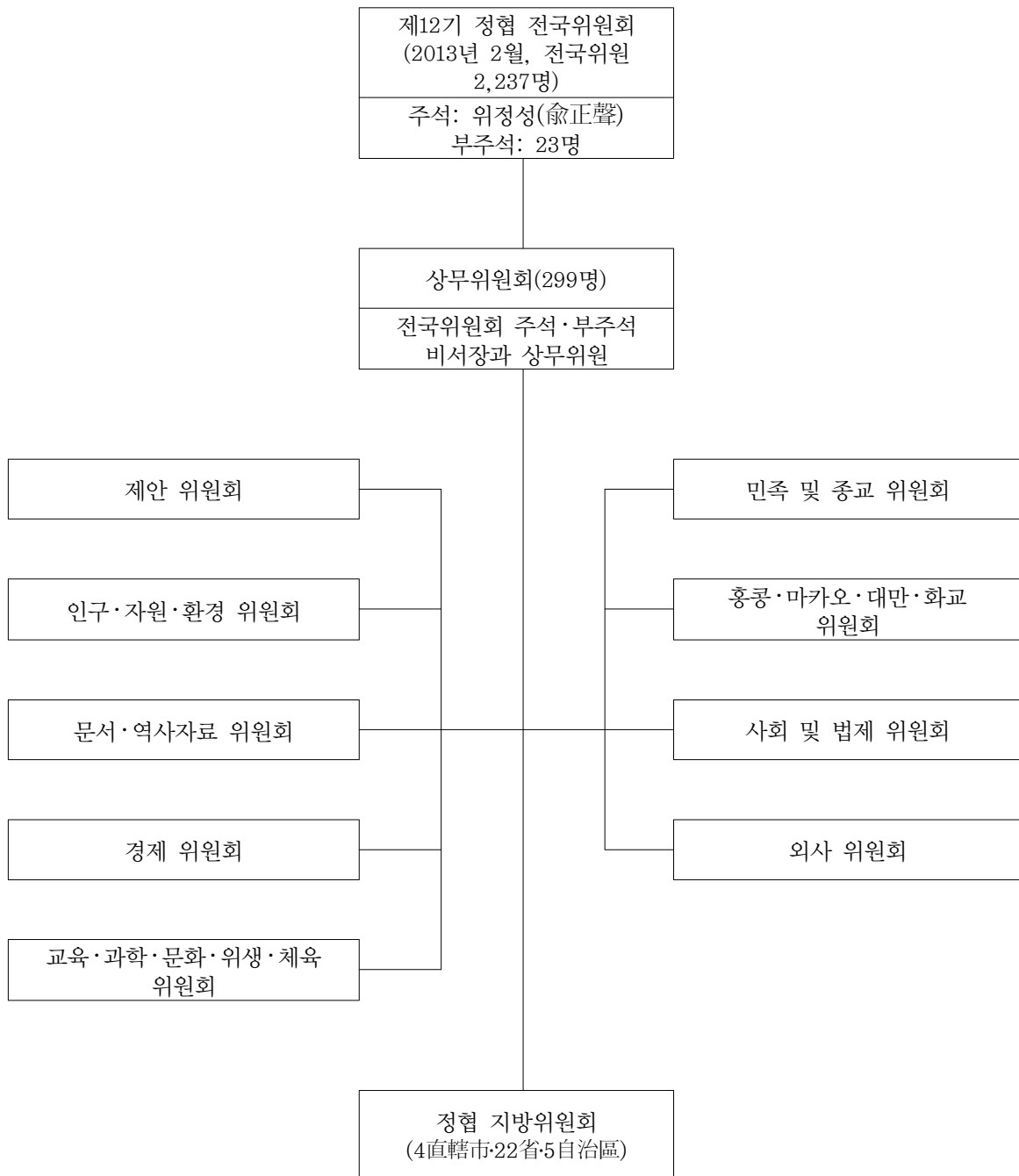
구분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조직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의 국가권력기관 - 국가행정기관, 심의기관, 검찰기관이 모두 전인대의 책임과 감독 하에 놓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의 국정 자문기구 - 정협은 헌법이 규정한 국가기구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있는 다당 협력의 성격을 띠고 있음.
법률적 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인대는 '1부 양원(一府兩院)'으로 구성되어, 산하에 정부와 법원, 검찰원이 존재하는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헌법과 법률은 정협과 전인대에 동일 혹은 비슷한 국가권력을 부여한 바 없음. - 정협은 '1부 양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따라서 '1부 양원'은 정협에 어떠한 법적 책임(법률 및 업무감독)도 지지 않음.
직능 및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인대는 정책 결정 후 '1부 양원'의 집행과정을 감독하며, 입법권, 인사권, 감독권 및 결정권을 행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협은 정책 결정 전 유관 문제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정치협상(政治協商), 민주감독(民主監督), 정치에 참여해 정무를 논의(參政議政)할 수 있음.
법률적 근거 및 법률 효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인대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입법을 진행하고, 국가기관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들 활동의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협은 당정에 의거해 업무를 진행함. - 당정에 따라 중요한 문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거나, 국가기관 및 그 소속인원에 대한 업무 처리 중 발견된 문제에 관해서는 주로 비판과 건의를 통해 감독하는 체계임. - 일반적으로 정협의 상기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 효력은 없음.
대표 선출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인대는 헌법과 선거법, 대표법 등에 의거해 선거권 있는 유권자의 직접 혹은 간접적인 선거로 통해 선출된 조직임. - 법적으로 규정된 각 계층을 포함한 국가권력기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회 개최되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의 참가단위, 위원 수, 인원선출 및 업계별 안배는 모두 지난 회 전국위원회주석회의의 심의 동의 후에 결정되며, 상무위원회가 협상해 결정함. 단, 선거를 통해 결정하지 않음.

주: 중국의 정당은 다수당인 중국 공산당 외에도 민주당파가 있음. 민주당파는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중국민주동맹, 중국민주건국회, 중국민주촉진회, 중국농공(農工)민주당, 중국치공(致公)당, 구삼학사(九三學社), 대만민주자치동맹 등 8개 당으로 구성됨.

자료: 『新浪網』, 「人大與政協區別」(검색일자: 2013. 3. 5), 「2013년 중국 양회 주요 내용과 향후 경제정책방향」(KIEP)에서 재인용.

부록 2. 정협과 전인대 조직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조직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조직도

